

배포일 2021년 8월 20일 보도일시 2021년 8월 20일 (즉시)

담당자 김석원 사무국장

TEL 02-6412-4778~9 FAX 02-6412-4776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6 테헤란오피스빌딩 301호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정부, 금융당국 및 은행, 국회 각자의 책임 다 해달라-

-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는 8월 20일 (금),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금법 신고 마감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ISMS 인증을 취득한 대다수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아직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못해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정부, 금융당국과 은행, 국회가 각자의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 금융당국 및 은행, 국회에 대해 각각 ▲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투자자 피해, 대규모 실직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 마련 ▲ 실명계좌 발급 적극 협조 및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 국회에 대한 특금법 신고 기간 유예를 포함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또한 그동안 협회는 협회 소속 회원사들과 함께 가상자산 산업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 자정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왔으며, 앞으로도 블록체인 산업 발전,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 FATF, IDAXA 등 해외 주요 기구들과 트래블 룰 표준안 마련 ▲ 자율규제 체계 보완 등 업계의 자정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오갑수 회장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노력이 외면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술과 인프라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